

보도일시	2018. 9. 13.(목) 조간(온라인 9. 12. 14:30)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	
배포일시	2018. 9. 12.(수) 09:00	담당부서	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과 과기정통부 연구제도혁신과 교육부 학술진흥과
담당과장	이석래(02-2110-2350) 이재훈(02-2110-1680) 윤소영(044-203-6604)	담당자	정담 사무관(02-2110-2354) 정재현 사무관(02-2110-1681) 권지은 사무관(044-203-6871)

연구비리 뿌리 뽑고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 추진

- 부실학회 관련 연구비 유용·연구부정에 대해 엄중 제재조치 -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유영민, 이하 '과기정통부')와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)는 9월 12일(수) 정부과천청사에서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 방안 논의를 위해 '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'를 개최하였다.
 - 간담회는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이 주재하고, 교육부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 및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(회장 김명자, 이하 '과총'), 한국과학기술한림원(원장 이명철) 등 국내 과학기술 관련 기관, 주요 대학 총장과 일반 연구자들이 참석하였다.

< 부실학회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방안 발표 >

- 특히,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부실학회와 관련한 실태 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방안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었다.
 - ※ 부실학회 : 학문의 발전보다는 참가비 수입 등 영리적 목적이 강하여 발표 또는 심사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학술대회, 가짜학회로도 표현하는 경우가 있으나, 일단 학회의 형식(발표 실시, 논문출판)은 갖추고 있어 이하 자료에서는 '부실학회'로 표현

-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238개 대학, 4대 과학기술원(KAIST, GIST, DGIST, UNIST, 이하 '과기원') 및 26개 과기출연(연)을 대상으로 W***T 및 O***S(이하 'W학회', 'O학회')에 최근 5년간('14년~'18년) 참가한 실태를 전수조사하였다.
 - W학회와 O학회는 최근 국내외에서 부실성이 높은 학회로 지목된 데 따른 것이다.
 - ※ W학회 : 언론을 통해 그 부실성이 자세하게 알려짐
 - O학회 : 미국연방거래위원회(FTC)가 허위정보로 연구자를 기만한 혐의로 기소하여 예비금지판결('17.11월)
- 조사 결과, 최근 5년간 한번이라도 W학회와 O학회에 참가한 기관은 조사대상 기관의 40%인 총 108개 기관(대학 83개, 출연연 21개, 과기원4개)이며,
 - W학회와 O학회에 참가한 횟수는 총 1,578회, 참가한 연구자 수는 총 1,317명, 그중 2회 이상 참가자는 18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. (붙임 2 참고)
-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부실학회 참가행위가 정부R&D 연구비 유용 및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*에 악용될 소지가 높고 더 나아가 국내 과학기술계 전반의 연구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해당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 - * 연구부정행위 : 「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」(교육부 훈령)에 따라 논문 등의 위조, 변조, 표절, 부당한 저자표시, 부당한 중복게재 및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,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등을 지칭
- 우선 각 대학·출연(연) 등 연구기관별로 특별위원회(이하 '특별위')를 구성하여, W학회 및 O학회 참가자에 대해 소명을 받고 조사 및 검증을 하도록 한다.

- 각 연구기관은 특별위 조사결과 외유성 출장 등 연구윤리규정 또는 직무규정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신속,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.
- 또한 정부는 연구기관의 조사·검증 또는 처분이 미진한 경우 재조사 요구와 함께 기관평가 반영, 정부R&D 참여제한 등 기관단위 제재 또는 불이익 부여도 검토한다.

□ 이에 더하여 정부는 특별위에서 보고된 사안 중 연구비 부정사용자와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의 정밀정산과 추가 검증을 거쳐 추가적으로 정부R&D 제재처분(참여제한, 연구비 환수 등)을 부과할 방침이다.

< 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 논의 >

□ 간담회에서는 부실학회 외에도 연구비 횡령, 저작권 편취, 논문 끼워주기 등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연구 윤리문제를 과학기술계의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, 건강한 연구문화 정립을 위한 과학기술계 각 주체별 실천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가 이어졌다.

- 먼저, 연구계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. 오늘날 연구자들에게 요구되는 윤리규범을 스스로 확립하고,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. 그런 의미에서 과총은 같은 날인 9월 12일 오전 ‘연구윤리 재정립을 위한 대토론회’를 개최한 바 있다.
- 대학 등 연구기관 또한 책임 있는 연구행정 지원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연구비 집행에 대한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, 연구행정 인력을 확충하는 등 연구 관리역량을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. 또한, 연구윤리 문제의 원인으로 제기되는 논문실적의 양적 평가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.

- 한국연구재단 등 정부R&D관리 전문기관은 연구윤리를 연구자가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연구비 부정 못지않게 논문 표절, 부당저자표시 등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한다.

- 정부는 정부R&D 윤리지침을 마련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조장하는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등 건강한 연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적극 지원 한다.

□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“성숙한 연구문화는 우리나라 연구수준이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므로, 이를 위해 과학기술계 전체가 노력해야 할 것”이라고 강조하면서,

- “각 기관은 부실학회 참가자를 철저히 조사하고, 연구비 유용 또는 연구부정이 드러날 경우 정부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.”고 말했다.
- 또한, “과기정통부는 논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보다 구체화하여 빠른 시일 내 ‘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 방안’을 확정하고 추진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붙임 1. 간담회 개최 개요

2. 부실학회 실태조사 현황 및 조치방안

	<p>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담 사무관(☎ 02-2110-2354), 정재현 사무관(☎02-2110-1681), 교육부 권지은 사무관 (☎044-203-687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-	--

붙임1 「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」 개최(안)

□ 개 요

- (목적) 부실학회 참가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방안, 연구윤리 전반의 문제 관련 과학기술계의 성찰 및 변화방향 논의·의견수렴
- (일시/장소) '18.9.12(수) 14:30-15:50 / 과기정통부 5층 생각나눔방(518호)
- (참석대상) 정부, 과학기술 관련 기관·단체, 젊은 연구자 등 20여명
 - (정부) 과기정통부(장관, 과학기술혁신본부장, 연구개발정책실장, 성과평가정책국장 등), 교육부(고등교육정책실장)
 - (기관·단체) 과총 회장, 한림원 원장, 연구재단·연구회 이사장, 대학 총장 등
 - (젊은 연구자) 대학·출연(연)의 30~40대 연구자

□ 세부일정(안)

< 사회: 연구제도혁신과장 >

시간	내용	비고
14:30~14:35 (5')	모두발언(공개)	과기정통부장관
14:35~14:50 (15')	간담회(비공개) ① 「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 방안」 설명 (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방안 포함)	연구개발정책과장
14:50~15:45 (55')	② 자유토론	참석자
15:45~15:50 (5')	마무리	

붙임2 부실학회 실태조사 현황 및 조치방안

1 실태조사 현황

□ 조사 개요

- (조사대상 학회) 해외학회* 중 부실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표적인 W학회 및 O학회에 최근 5년간('14년~'18년) 참가 실태
 - * 학문의 발전보다는 영리적 목적이 강하여 발표 또는 심사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학회들로, 일단 학회의 형식(발표 실시, 논문출판은 갖추고 있어 “부실”이라는 용어가 적함)
- (조사대상 기관) 총 268개 기관 : 대학(238개/4년제), 과기출연(연)(26개) 및 과기원(4개/ KAIST, DGIST, GIST, UNIST)

□ 조사 결과

- (참가한 기관) 대학 83개, 과기출연(연) 21개 및 과기원 4개 기관
- (참가한 횟수) 총 1,578회 참가 (W학회 1,137회, O학회 441회)
 - 대학 1,289회, 출연(연) 208회, 4대과기원 81회
- (참가자 수) 총 1,317명이 참가
 - 1회 참가 1,137명, 2회 참가 134명, 3회 이상 참가 46명
 - 대학 1,057명, 출연(연) 184명, 4대과기원 76명

< W학회 및 O학회 참가 현황 (2014~2018) >

구분	참가횟수(회)			참가자수(명)			
	계	W학회	O학회	계	1회	2회	3회이상
총계	1,578	1,137	441	1,317	1,137	134	46
대학(83개)	1,289	1,001	288	1,057	905	112	40
출연(연)(21개)	208	93	115	184	165	14	5
4대과기원	81	43	38	76	67	8	1

□ W학회 및 O학회 참가 상위 기관 (기준 : '14년~'18년 상반기)

① 대학교 상위 20개 기관

< 참가 횟수 상위 20개 기관 >

순위	기관명	참가횟수(회)		
		계	W학회	O학회
1	서울대	97	70	27
2	연세대	91	74	17
3	경북대	78	65	13
4	전북대	65	40	25
5	부산대	62	61	1
6	중앙대	52	28	24
7	세종대	51	44	7
8	국민대	42	41	1
9	서울시립대	39	34	5
10	강릉원주대	37	37	0
11	아주대	28	26	2
12	전남대	26	23	3
13	가천대	25	11	14
14	이화여대	25	25	0
15	경남과학기술대	24	15	9
16	한국교통대	24	20	4
17	동국대	23	19	4
18	경상대	22	18	4
19	성균관대	21	19	2
20	부경대	19	11	8

< 참가자 수 상위 20개 기관 >

순위	기관명	참가자수(명)			
		계	1회	2회	3회 이상
1	서울대	88	81	5	2
2	연세대	82	73	9	0
3	경북대	61	49	9	3
4	부산대	51	43	7	1
5	전북대	48	40	6	2
6	중앙대	46	43	1	2
7	세종대	35	23	10	2
8	서울시립대	31	23	8	0
9	국민대	25	16	4	5
10	강릉원주대	25	21	1	3
11	전남대	25	24	1	0
12	이화여대	24	23	1	0
13	아주대	23	19	3	1
14	가천대	22	19	3	0
15	성균관대	20	19	1	0
16	부경대	19	19	0	0
17	경남과학기술대	18	14	2	2
18	한국교통대	18	13	4	1
19	경상대	18	15	2	1
20	영남대	17	16	1	0

② 출연(연) 및 4대과기원 상위 5개 기관

< 참가 횟수 상위 5개 기관 >

순위	기관명	참가횟수(회)		
		계	W학회	O학회
1	KAIST	46	29	17
2	한의학연	31	-	31
3	건설연	29	29	-
4	생기연	23	19	4
5	생명연	22	-	22

< 참가자 수 상위 5개 기관 >

순위	기관명	참가자수(회)			
		계	1회	2회	3회 이상
1	KAIST	43	40	3	-
2	한의학연	26	21	5	-
3	건설연	21	15	4	2
4	생기연	21	20	-	1
5	생명연	21	20	1	-

2

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방안

1 [각기관] 부정행위 조사·검증 및 인사조치

◇ 기관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실학회 참가 경위를 소명받고, 연구 부정행위, 연구자 윤리 등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조사

- (소명) W***T·O***S 참가자에 대해 소명을 받고, 고의적 또는 반복적 참석의 정황이 있는 자를 선별
- (조사) 선별된 자를 대상으로 각 부서에서 연구비 부정사용, 연구부정, 교직원(연구원) 직무윤리 관점에서 문제점을 조사

< 소명·조사 분야 및 항목 >

분야	주요 소명·조사 항목	담당부서	조치기한
연구비 부정사용	• 외유성 국제 학술대회 출장 • 출장경비 과다집행 등	감사실 산학협력단	'18.10월말
연구부정 (연구윤리)	• 부실심사를 악용한 논문의 표절 및 위조 • 중복게재(자기표절) 등 실적 부풀리기	연구진실성위원회 (연구윤리위원회)	'18.12월말
교직원(연구원) 직무윤리	• 부실학회임을 알고도 상습적으로 참가 (통상적 용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) • 학생의 반복적 참가를 권유 또는 묵인	교원윤리위원회 (연구윤리위원회)	'18.12월말

※ 연구부정행위의 대상 :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(교육부)
- 위조 / 변조 / 표절 / 부당한 저자표시 / 부당한 중복게재(자기표절) / 연구부정행위 조사방해 /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 용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

- (검증) 연구부정 및 직무윤리 관점에서 조사 결과는 기관별 특별 위원회에서 검증·판정하고 이의신청(30일) 절차를 거쳐 확정
- 연구비부정사용의 소명 결과는 전문기관에 제출, 정밀정산으로 연계
- (징계) 조사·검증 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자에 대해 기관장이 인사위원회 등을 열고 개인별 징계 여부를 심의하여 처분
- 주요보직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징계처분 사유가 아니더라도 보직해임 등 조치 (학생은 연구윤리 교육을 통해 계도)
- (결과보고) 조사·검증 및 징계 결과를 정부에 보고

2 [부처·전문기관] 기관의 조사결과 검증 및 정부R&D 제재조치

- ◇ 각 기관의 조사·검증 결과를 검증하고 정밀정산을 통해 연구비 부정 여부도 추가로 조사
- ◇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와 별도의 정부 R&D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

(기관 조사·검증 결과 검증) 연구재단 등 전문기관(출연연 기본사업은 연구회)은 기관별 조사검증 내용이 적절한지 검증

- 조사검증이 형식적인 경우 **제조사 요청**과 함께 **기관에 제재 또는 불이익**의 부여 검토(기관평가, 기관간접비, 정부 R&D 제재수위 상향 등)

(정밀정산) 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에서 해당 연구과제를 정밀정산

- 기관별 조사검증 내용 및 소명결과를 토대로 해당 연구과제를 정밀정산하여 출장비 등 연구비부정 사용여부를 조사

※ W학회 및 O학회를 제외한 부실의심학회에 상습적으로 참가한 자에 대해서도 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이 관련 정부 연구과제를 정밀정산하여 연구비부정 여부를 조사

(정부 R&D 제재 심의) 각 기관의 조사검증, 전문기관의 정밀정산 등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에서 제재여부를 심의

- (제재사유) 연구비부정* 및 연구부정** 중심으로 심의
 - * 학술대회를 빙자한 출장비 부당집행 등
 - ** 논문의 표절·위조·부당한 저자 표시, 부실학회에 고의적·상습적으로 참가해 통상적 용인의 범주를 벗어난 경우
- (처분기준) 모든 부처에 적용할 제재처분 대상 및 수위 등을 마련하되, 학생들은 정부 R&D 참여제한 보다 연구윤리교육을 통해 계도
 - 조치가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전체 정부R&D 참여제한도 검토

(제재 처분) 전문기관 심의 결과에 따라 각 부처 명의로 제재 통보

< 참고 : 정부 R&D 제재 사유 및 처분 내용 >

제재사유	처분내용		
	참여제한	환수(기관)	제재부가금(개인)
연구비 부정 사용	○	○	○
연구 부정행위(부정한 방법으로 연구)	○	○	X
연구개발결과 극히 불량	○	○	X
연구개발결과 누설·유출	○	○	X
연구개발과제 수행포기	○	○	X
기술료 미납 및 사업비 환수금 미납	○	X	X
지식재산권 개인명의 출원·등록	○	X	X